

대학 교육 정책 50년: 그 팽창의 역사

정재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연구부장



1. 들어가는 말

1 945년 해방 당시 남한에는 19개의 고등 교육기관에 1,490명의 교원과 7,819명의 학생이 재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지표』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신학교 등 각종 학교를 포함하여 287개의 대학에 49,621명의 교원과 1,583,248명의 학생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반세기 동안 학교수로는 15배, 학생수로는 202배 팽창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199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통계상으로 69.8%에 이른다. 물론 이 숫

자는 당해년도 대학 1학년 재학생 수를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숫자로 나눈 것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단계의 취학 연령인 만 18세~23세까지의 인구를 분모로 하여 실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취학률만을 보더라도 1993년 기준으로 44.8%로, 30.7%(1989년 기준)인 세계 초강대국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 정말 기적과 같은 사실 아닌가?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대학 중 '대학같은 대학'은 얼마나 있을까?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는 337.7달러로 영국의 6,416.8달러, 일본의 11,733.9달러에 비해 월등히 낮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37.8명으로 독일의 8.5명, 일본의 9.9

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학교시설, 실험기자재, 도서관 장서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대학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로 간단하게 결론짓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정원이 많을수록 명문대학으로 불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육여건도 비교적 나은 편이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교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대학의 교육여건에 의해 정원 증원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난 50년간의 우리 대학들을 양적 팽창에 의한 질적 저하라고 평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은 왜 이와 같이 공통처럼 비대해졌으나 실속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2. 대학 팽창의 원인 : 대학정책의 부재

해방 이후 대학 팽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그 주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제하에서 억제되었던 고등교육 수요가 해방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둘째로 문교부의 방임주의 대학정책, 셋째로 토지개혁의 영향, 넷째로 6·25 기간중 대학생의 병역 면제, 다섯째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난, 여섯째로 차단된 일본 유학의 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대학 팽창에

일조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화기 신교육 도입기의 대학교육정책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갑오교육개혁의 주된 노력은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 한 가지는 국민대중을 위한 초등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인적 자원을 시급히 육성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 갑오개혁 정부는 한성사범학교와 13개의 관립소학교, 그리고 전국에 걸쳐 109개의 공립소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후자의 목적을 위해 각종 외국어 학교와 무관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 법관양성소 등을 설립하였다. 이 두 가지 교육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의 지도층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이 실패가 갑오교육개혁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종래의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성균관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1896년까지만 해도 갑오개혁 정부는 성균관을 폐지시키고 그 기능을 중학교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단되고 성균관은 성균관대로 남고, 7년 과정의 중학교가 새롭게 설립되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하의 고등교육은 유일한 정규대학으로서 경성제국대학과 각종 전문학교들이 산재해 있었다.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는 교

육내용과 학과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단지 3년과 4년이라는 수업연한의 구분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대학과 전문학교 간에 엄격한 위계를 설정하였다. 즉, 졸업자가 가지는 자격 규정, 문관 임용,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임용 고등 시험과 사립학교 교원 자격 등에 엄격한 차별을 두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하에서 경성제대 졸업자들은 대부분 고등 문관 시험을 통해 총독부의 행정·사법 관료로 충원되거나 교육계나 경제계의 고급 엘리트가 되었다. 그러나 전문학교 졸업자들은 하급 판임관급 관리나 중등학교 교사 등으로만 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도 엄격하게 차단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리 국민에게는 커다란 불행이었지만,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후에도 이러한 고등교육체계의 차별적 위계화 정책이 여전히 답습되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대학 팽창의 주된 기제로 작동하였다는 데에 있다. 해방직후 고등교육의 재편 과정에서 우선 일제하의 대부분의 전문학교는 대학이나 대학교로 승격 개편되었다. 미군정청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국립 서울대학교와 함께 미군정 당시 교육 주도 세력의 핵심 인물인 김성수, 백낙준, 유억겸, 김활란 등이 깊이 관계하고 있었던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군정청 문교부는 고등교육기관을 3개 이상의 분과 대학으로 구성되는 ‘종합대학’, 1

개의 분과 대학만이 있는 ‘단과대학’, 정규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학 정도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관’, 고등 학술기예를 전수하는 ‘학관’의 4종류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4종류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에서 전혀 질적인 차별을 갖지 못하였으며 학관이나 대학관은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기관에 불과하고, 또 대학은 끊임없이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즉, 4종류가 아닌 4등급의 고등교육 체제였던 것이다. 예컨대 당시 대표적인 대학관이었던 국민대학관은 1947년 국민대학으로 승격하고, 조선정치대학관은 49년 정치대학(건국대학)으로 승격하게 되는데, 승격전후 간에 학과 구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정원만 증가되었던 것이다.

대학관과 유사한 형태로 대학과 위계를 이루며 고등교육 팽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제도로서 전문부, 야간대학, 별과생, 청강생 제도가 있다. 전문부는 본래 일제하에서 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설치된 3년제 전문과정이었다. 이 제도는 본래 1949년까지만 존치되는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새로 설립된 일부 대학이나 대학관에서도 많은 전문부를 설치하였다. 이들 전문부는 입학자격이나 교육과정이 대학교와 동일하였으며, 단지 수학연한만이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하 대학과 전문학교의 관계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전문부 학생들은 졸업후 거의 모두 대학에 편입하게 되어 결국 전문부라고 하는 제도는 대학 팽창의 중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야간대학의 경우도 직업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해방직후부터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국민대학의 경우가 야간대학에서 출발하여 정원을 확보한 뒤 주간대학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 밖에도 청주상과대학(청주대학), 근화여자초급대학(덕성여대), 남조선대학(동아대학) 등이 야간 대학을 통해 정원을 확대하였다.

별과생 제도 또한 '반학생(半學生)'이라고 불리는 직장인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행되었으나, 재학중 정규학생과 동등한 정도의 학점을 취득하면 학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편입이 가능했으므로, 결국 대학 졸업생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청강생 제도 또한 교육법 제114조에서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됨으로써 정원외 입학에 허용하는 공식통보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관, 전문부, 초급대학 등은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또 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간주되고 또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대학,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대학 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별과생, 청강생 제도 등을 통해 정원외 입학생들도 크게 증가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외 학생수가 오히려 정원보다 월등하게 많아지기도 했던 것이다. 예컨대 국민대학의 경우 1948년 정원 350명에 재학생은 723명이었으며, 1956년에는 정원 600명에 재학생은 1,535명으로 재학생 비율이 무려 256%에 달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등교육기관은 1961년 현재 종합대학 18개, 대학 38개,

초급대학 10개, 각종학교 15개 등 총 81개로 증가하였으며, 정원 학생만 해도 144,822명으로 해방직후보다 18배 이상 팽창하였던 것이다.

3. 대학 팽창의 과정 : 정치적 정당성 창출

5·16 군사정권 아래에서 시행된 대학정비는 - 비록 그것이 실패하긴 했지만 -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최초의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학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자의 실업난, 소위 '우꼴탑'이라고 불리는 농촌 경제의 파탄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학망국론'이라는 말이 언론에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식자층에서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강화와 학사학위 국가고시제를 대학 팽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5·16 군정의 최고회의 문교사회 분과위원회나 정책연구실에 참여했던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대학 정책을 '무계획적 방임정책'이라고 진단하고 당시 대학교육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대한 투자가 과잉상태라는 것이다. 당시의 대학 인구도 선진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에 대한 과잉투자로 대학 졸업생의 40%만이 취업하고 나머지는 고등실업자가 되어 오히려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둘째, 대학의 학과나 지역적 분포가 국가 경제의 인력 수요와 전혀 불일치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의 대학들이 인문사회계 학과 증원에 치중하여, 과학기술이나 실업교육에 관련된 학과의 비중이 극히 낮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었다.

셋째, 학생운동과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로 그나마 부실한 상태의 대학이나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5·16 군정은 대학정원의 감축,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의 부정부패 일소라는 목표를 설정, 대학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저돌적인 정비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62년 신학년 시작 직전에 대학 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최종확정안에 따르면 21개 대학, 147개 학과를 폐지하고 학생 정원을 25,510명 감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정비 계획도 1963년 초 다시 재수정을 겪게 되는데, 결국 학생정원은 정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고 학교수는 초급대학의 인가로 오히려 23개나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시 급격한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5·16 군정의 대학정비 정책은 왜 실패하였을까? 정부의 힘이 너무 취약해서일까? 같은 논리로 대학의 영향력이 정부의 권능을 압도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일까? 대학 정비에 대한 논리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16을 전후하여

대학 정비에 대한 여론은 당시에 이미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회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인사와 수 많은 정치깡패들을 숙청할 정도로 5·16 군정의 물리적 강제력도 막강한 것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나는 깡패입니다.”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굴비처럼 묶여 거리를 끌려다니던 것을 보고 잘 한다고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16 군사정권은 대학망국론까지 나돌던 대학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여, ‘혁명문교의 최대의 실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5·16 군정 이후 1992년 문민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정부와 대학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관계는 단순히 힘과 명분의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에 있었다. 국가가 대학에 대해 갖는 이미지만 일차적으로 자신들에 대해 최대의 정치적 적대 세력이라는 것이었다. 대학은 끊임없이 반정부세력을 양성하는 소굴이요, 또 국가의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란 대학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한 마디로 대학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학교육과 관련한 정부와 일반국민의 관계는 표리가 상반되는 것이었다. 정부와 국민들은 대학의 팽창과 그 비효율성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는 듯하였지만,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의 팽창을 내심 원하고 있었으며, 이런 국민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정부는 대학 정원

확대를 정치적 정당성 창출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사실 물가나 공공요금 정책 등의 경제문제를 제외하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항상 교육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대학 정원은 급격히 확대되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국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이 대학에 갖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필요악'이라는 것이었다. 해방후 지금까지 대학의 등록금이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전디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었다. 자식 둘을 동시에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집안은 지난 50년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흔히 '교육열'로 발현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요인에 의해 자식이 '사람 대접'을 받게 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학이 자신의 자녀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기관이라고 인식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국민 누구나 다 대학에 들어가 보았자 배우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국민들의 수요를 토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한 마디로 정원만 확보해 놓으면 비싼 등록금을 안고 들어올 고객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대학, 국민들의 삼각관계 속에서 정부의 대학정책은 결국 두 가지로 나

날 수밖에 없었다. 즉, 대학정원은 끊임없이 확대시켜 주되, 대학의 반정부 투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정당성이 결여된 전두환 정권에서 내놓은 7·30 교육조치는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7·30 교육조치로 1979년 483,519명이었던 대학생 숫자는 졸업 정원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반이 된 1984년에 1,130,145명에 이르러 무려 2.3배나 증가하였던 것이다.

4. 최악의 시나리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대학 팽창은 쉬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대학 팽창에 대한 저지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9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단계별 대학정원에 대한 국가 통제의 폐지 선언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물론 정부의 논리는 대학을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대학간의 자유 경쟁으로 우수한 대학은 살아 남고, 열등한 대학은 저절로 도태된다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논리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대학정원 통제의 폐지와 고등교육시장 개방으로 많은 대학들이 새로 설립되거나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들은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증가 추세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 소비자들은 더욱 많아진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싸고 질 좋은 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대학은 고객 확보를 위해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 볼 필요가 있는가?

먼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결코 줄어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 현재 722,451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1993년 대학 입학생은 각종학교를 포함하더라도 403,253명에 불과하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물론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재수생도 있고 또 취업해 있더라도 학력간의 경제적·사회적 차별을 통해 대학진학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입학코자 하는 많은 잠재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 팽창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 예컨대 1953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7,388명에 불과한데 대학 입학자 수는 18,041명으로 대학 입학자 수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능가한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대학과 직장을 동시에 다녔던 것이다.

또 한 가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서로 담합하여 등록금은 끊임없이 인상하지만, 결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의 역사를 보면 상품 제조업자들이 적자생존의 처절한 경쟁 속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 승자만 남고 패자는 도태되는 경우보다는, 서로 담합하여 공생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 대학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대학원으로 상승되리라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노동시장과 학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직업구조가 끊임없이 상위 학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에 국민학교 졸업자면 가능했던 직업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들로 채워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던 직업들이 대학 졸업자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고졸 실업률의 증가가 대학 진학을 더욱 부추겼다는 역사적 사실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대졸 실업률의 증가가 대학원 진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눈치 빠른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대학원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예사로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대학 취학률 90%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더욱 많아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학 졸업자들의 대학원 진학 열기는 더욱 확대되고 대학원 진학 시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풍습이 지금의

대학진학 시험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교육산업은 더욱 비대해지고 대학원 입시 준비학원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초과잉투자로 국가 경제는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일없이 노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중대한 사회 불안 세력이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

5. 맺는 말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만큼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대학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은 없었다. 서구에서는 대학의 기능을 교육·연구·사회봉사라고 하는데, 대학의 목적하면 으레 우리의 학자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이 주장을 인용하곤 했다. 정말 우리에게도 대학의 기능이 교육·연구·사회봉사인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교육·연구·사회봉사인가? 인구의 90%에 달하는 대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내보내는 것이 교육이고, 학술연구조성비를 받아 보고서를 내는 것이 연구이고, TV와 신문에 등장하여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한 마디 거드는 것이 사회봉사인가?

1948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에는 “국민학교도 변변히 마치지 못한 학생이 과반수인 대학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고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유지보다는 학교 자체의 설립·유지를 위한 대학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전통사회에서 우리의 대학이었던 성균관은 국가의 고급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공무원 교육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박한 지식보다는 청렴 결백한 성품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선 초에 비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성균관의 정원은 조선 말기까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균관의 설립 이념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은 이와 같이 분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 자신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이고 또 사회적 책무가 무엇이어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대학 팽창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무엇인지, 아니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합의에 터해 대학을 정비하고 개혁해야 할 주체는 결국 정부라는 것이다. ▣

정재걸/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연구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가 있고, “동도서기론 연구 (I), (II)” 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